

檢 “부정의한 역사 되풀이 안돼”... 쫓 내란죄 이어 실형 받을까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6개월 구형 의미와 전망

목격자들 증언 등 헬기사격 입증... 다음달 법원 판단 주목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픔 기억하는 사람 조롱 안돼” 전씨측 헬기사격 부인 속 5월단체 “유죄는 당연한 결과”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전씨가 “계엄령 선포와 공수부대 투입,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강경진압, 실탄분배 등 무장 및 비무장시민들을 상대로 한 발표허가의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실형 선고,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전씨의 마지막 재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기 앞서 의견 진술에 해당하는 ‘논고(論告)’를 통해 사건의 의미와 구형량을 정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는 부분적 진실 또는 거짓되거나 잘못된 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을 비교하기도 했다.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

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상대주의,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단 사회에 공개되지만 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일부 세력과 언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논리로 역사적 사실과 경쟁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적 계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처럼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게 되는 게 되풀이되면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전씨를 다짐들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측은 “합리적으로 보면 실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검찰 의견을 반박했다. 전씨측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사격은 비이성적 사회

가 만들어낸 완전한 허구 망령”이라고 했다.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도 없다고 했다. 헬기사격 목격자들은 상이한 시간, 장소에서 다른 목격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중 어느 한 사람이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목격자와 동행한 사람도 없어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나 동행자를 모른다고 진술 하는 점 등을 내세워 40년 전 목격자들의 예기치 못한 기억들을 담보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다시 반복했다.

전씨측 변호인은 “21일 오후 10만명의 시민이 도중에 구름처럼 움직였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사격했다면 모두 생생하게 목격했을 것이고 대낮에 상공에서 벌어진 사격을 입증한 증거는 차고 넘칠 것이다.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했다. 그는 “헬기에서는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실형 선고되나=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피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 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전씨가 고령인데다, 건강상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5·18과 관



전두환씨의 사자 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열린 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소인인 조영대(맨 오른쪽)신부가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전씨가 지난 1997년 특별사면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선처’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선고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전씨는 사상 처음으로 2년의 징역을 사는 대통령이 된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받은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전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오월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검찰 구형에 대한 5월 단체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유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나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환영한다”면서 “재판부는 수많은 목격자와 증언이 있음에도 부인과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5·18의 역사를 바로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태일이 외쳤던 근로기준법, 여전히 안 지켜진다

전태일 50주기 직장인 인식 조사 호남 38% “제대로 법 보호 못받아”

노동자 전태일이 지난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스러진 지 50년이 흘렀음에도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은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핑계로 부당해고와 직장갑질에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열악한 노동현실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노동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태일 50주기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북을 포함한 광주와

전남·북지역 응답자들의 38.2%도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규직(34.7%)보다 비정규직(47.8%)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미준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45.1%)에서 높은 비율이 나왔고 소득 분포별로는 고소득 집단(월급이 500만원 이상, 26.4%)보다 월급 150만원 이하 저소득 집단(41.2%)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광주지역도 비슷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이 최근 광주 동구 동명동 편의점과 카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80% 이상이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명동 인근 카페에서 밤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C씨는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인 8200원 수준이지만 낮다고 불

평하면 짤릴지 몰라 최저임금을 채워달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50년 전보다 ‘노동자(직장인)의 삶과 처우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63.0%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회사를 다니다 해고당한 D씨는 D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됐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별다른 조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분야로 ‘노동시간 및 휴가’(51.0%)를 첫손에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이 일터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들 사격 실력 ‘낙제 수준’

최하위 5등급 비율 가장 많아

광주·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사격 실력이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사격실력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방청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정례사격에서 전남청의 경우 ‘낙제점’인 5등급(60점 미만)을 받은 경찰관 비율이 14.02%(693명)로 전북청(16.78%)을 빼면 전국 18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광주청도 낙제점을 받은 경찰관 비율이 13.64%(472명)로 전남 다음으로 많았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사격 실력이 전국 18개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등 사수’로 불리는 90점 이상 사격 1등급 경찰관 비율도 전남 12.73%, 광주 13.03%에 머무르면서 전국 지방청 가운데 하위에 속한다.

광주·전남 경찰의 사격 실력은 지난해 다소 향상되긴 했지만 올해 다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전남청의 사격 실력은 잊혀질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국감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전남청은 지난 2018년에도 전북(16.78%) 다음으로 사격 5등급 경찰관 비율(14.02%)이 많았고 광주청(13.64%)이 뒤를 이었다.

경찰 사격훈련은 시간 제한 없이 사격하는 완사와 빠르게 사격하는 속사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1등급(90점 이상)부터 5등급(60점 미만)으로 분류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휴 뒤 광주 빌라서 화재 일가족 1명 사망·2명 부상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 일가족 4명이 머물던 집에 불이 나 어머니가 숨지고 다른 가족이 중·경상을 입었다.

5일 오전 8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H빌라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집 안에서는 A(여·45)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A씨의 남편과 10대 아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대 딸은 창문 밖 에어컨 실외기 위로 대피했다가 소방대 도움으로 구조됐다. 이들 외 빌라 4층에 사는 주민 4명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집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